

국가시책 예산 교육청에 떠넘기기…어린이 보육까지 팽개치나

6년만에 교부금 감소…지방교육재정 빨간불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 결손으로 내년에 줄어들게 돼 지방교육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교육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사주기로 했으니 시·도교육청이 빚을 내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특히 누리과정,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세수 결손으로 지방재정교부금 되돌려줘야=교육부가 17일 발표한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천206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3475억원(-3.3%) 줄어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로 줄어든 것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2009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편성은 2013년 세수 결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차년도에 세수가 얼마 들어올 것인가를 전망하고서 내국세의 20.27%로 규모를 결정한다. 이후 차년도에 실제 세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결산, 예상했던 세수보다 덜 들어오면 차차년도에 교부금을 되돌려줘야 하고 예상보다 더 들어오면 그만큼 더 받는다.

지난해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국제수입이 예산안 편성 당시보다 8조5000억원 적게 걷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예·결산 차액에 따른 정산분인 2조6733억원을 국고로 되돌려줘야 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줄어들게 됐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편성에 따른 대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제시했다. 예산당국과 협의 끝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1조8000억원어치 사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은 시·도교육청이 빚을 내 모자란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언젠가 갚아야 하기에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누리과정 국고예산 내년도에도 한푼도 없어=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등 국가 시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기면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교육 예산을 짜는 데 부담이 더 커졌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2조2000억원, 초등 돌봄교실 66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한푼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누리과정은

세수 결손으로 감액 편성

교육부 “빚내서 충당하라”

대선공약 돌봄교실도 ‘0원’

지방교육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예산 항목으로 꼽히고 있다.

누리과정의 ‘재앙’은 예산 당국의 장밋빛 세수 전망에 기인한 탓이 크다. 정부는 2012년 누리과정을 3~4세 아동에게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했던 재원을 4세는 2014년, 3세는 2015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해마다 2조~3조원 늘 것으로 전망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0억원가량 늘어나는데 그저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규모가 당시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니 국고로 지원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만큼은 국고에서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산 당국에 먹히지 않았다.

◇초등 돌봄교실 확대 예산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도 비슷한 상황이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들에게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돌봄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 돌봄교실 예산은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연말 국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1008억원이 들어갔을 뿐이다. 올해 돌봄교실 예산에 국고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쳐 5900억원이 투입됐다.

내년에는 돌봄교실이 3~4학년으로 확대돼 필요한 예산이 66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돌봄교실 예산이 국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이 떠안게 됐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은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이 야당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나 예산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교부금 규모를 증액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절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행뉴스



“이번주는 승용차 없는 주간” ‘푸른 광주 21’협의회 회원들이 22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플래카드를 펼쳐두고 ‘승용차 없는 주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승용차 없는 주간은 ‘세계 차 없는 날’(9월22일)을 맞아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새누리 “경제 활성화 위해 확장” 새정치 “서민증세·부자감세 철회”

국회 제출 내년도 예산안 공방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심상치 않다.

새누리당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확장 예산 편성과 세제개편 필요성을 홍보하고 나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증세·부자감세’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두고 새정치연합에서 무책임 예산, 반서민 예산, 무대책 예산이라고 논평했다”며 “근거없는 비난에 가까운 논평”이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장은 이어 “야당은 근거 없이 언론을 통해 비평할 게 아니라 빨리 국회에 돌아와 내년도 예산 심의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예산 심의부터 정상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2015년도 예산안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10분10당 정책 자료를 별도로 배포, 야당의 비판 항목마다 정책적 논거를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 재정 필요성과 세제 개편의 시급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 부자감

세’를 철회하고 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맞장 토론을 제안하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기업의 법인세 인화와 중부세 인화로 1조5천억원을 감세했다”면서 “결국 이런 세수 부족이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으며 국가 재정파탄을 서민증세로 막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비상대책위원인 정세균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큰 줄기는 대출을 확대하고, 재정적자를 키우고, 서민증세를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이는 경기 진작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세, 자동차세, 담뱃값 등 간접세 인상 논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만에 40%대로 떨어졌으며,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어 주목된다.

22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9월 주간집계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하며, 49.7%를 기록했으며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1주일 전에 비해 4.1%포인트 하락한 41.7%를 기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권 상생...출향 인사 모임 만든다

광주·전북 출신 총망라...전남도 오늘 첫 회의

조 출범한 후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여론의 중심점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호남 출신 출향 인사들의 모임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당선자

시절 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출향인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하 호남미래포럼)이 지난해 발족 하기는 했지만, 전북이 제외됐고, 구체

적인 참여 폭이나 활동 범위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따라서 전남도는 호남미래포럼, 광주 시, 전북도 등과 논의를 거쳐 새로운 형태의 모임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필요성이 충분하고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과거 어느 때보다 상생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논의의 첫 시작점을 찍는 것”이라며 “향후 여러 목소리를 듣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식기자chadoll@

[오늘의 신문은]
세계 명사들의 특강

신문을 읽으며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을 만납니다
그들의 생각과 지식이 나의 논리가 됩니다
신문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누구나 배움다
“신문은 가장 큰 학교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